

중국의 공공정보화 동향 - 베이징시의 정보시스템 현황 소개 -

미래전략연구실 주임연구원 문정욱
(T. 570-4366, jwmoon@kisdi.re.kr)

1. 개요

각국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제는 융합과 확산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Web2.0 등의 개념이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Government2.0 즉 개방, 참여, 공유가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도 일반화 되고 있다.

얼마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중국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주력 사업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국가들 중 하나인 중국이 아시아 신흥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 인식속에 자리 잡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공공정보화 동향, 특히 올림픽을 개최했던 베이징시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2008)'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공공정보화 동향

중국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치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가 10.35명, PC사용자가 4.22명, 휴대폰 사용자가 34.83명, 전용통신선 사용자가 27.79명, 광대역망 사용자는 3.85명 등으로 나타난다. UN에서 발표하는 'UN e-Government Survey 2008'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대상국가 189개국 중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서 65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참여지수(e-Government Participation Index)에서는 21위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전자정부 순위 에 의하면, 중국은 전체 198개 국가 중에 6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관련 중국의 통계적 수치들은 중국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단기간에 얻어진 높은 성과라고 평가되

고 있다.

중국을 지난 2002년 전자정부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중국의 전자정부 목표 및 발전 전략의 틀을 명확히 하였고, 2005년 구체적인 세부 계획으로, 국민경제 정보화 추진, 전자정부 구축, 선진적 네트워크 문화 구축, 사회정보화 추진, 국방과 군대 정보화 건설, 종합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보완, 정보통신 자원의 개발,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 제고, 정보 보호 체계 구축 강화,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화 인재 육성 등 10개 중점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0년까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가 서비스의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할겠다는 최종 목표를 세우고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국가 전자정부 포털(www.gov.cn/english.gov.cn)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체적인 정보화 추진 방향에 맞추어 베이징시에서도 시 차원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우선 베이징시 산하에 베이징 정보화실을 두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및 베이징의 정보화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끔 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는 e-비즈니스, e-커뮤니티, 정보보호, 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베이징시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지방정부 업무의 약 85%이상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지방정부 부처간의 정보공유가 약 35%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약 50% 정도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 베이징 전자정부는 'The Capital's Window'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이징시에 소속된 모든 카운티들은 전부 포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정부 콜센터, 시정 관리 라디오, 디지털 TV 등은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수단이며, 네트워크 연결망은 시·군·구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다.

베이징시의 전자정부의 대표 포털인 'The Capital Window'는 1998년에 구축되었고, 2008년 현재 일일 평균 400만명이 접속하고, 메인 사이트 아래 160여개의 서브 사이트가 존재한다. 또한 베이징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청구서 발송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약 50만건 이상의 정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고, 약 400만명 이상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

베이징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또 다른 정보시스템은 디지털 공과금 납부 시스템이다.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케이블 TV 시청료, 광대역망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네트워크, 개인전화, 접속 터미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 4천개 이상의 접속 터미널

이 시내 은행, 스토어, 대기업 회사 빌딩, 주거 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여행자들을 위한 지역정보시스템(Digital Beijing Kiosk)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식당, 쇼핑, 숙박 등 여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베이징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영문으로 제공하는데, 하루 평균 66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시민들에게 올림픽 홍보를 위한 포털사이트(www.ebeijing.gov.cn)도 2003년부터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총 10개의 카테고리에서 올림픽 경기, 교통, 관광, 숙박,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800종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2005년부터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시민참여 시스템은 시민과 정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시민의 정부 감독 등을 위해 구축되었다. 시민참여 온라인 시스템(Live Room On-line)에 시민들이 민원, 질문, 건의사항 등을 올리면,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한다. 질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 민원이 전체의 약 46%, 제안이 12%, 불만사항 제기가 15%, 단순 질의가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와 GIS(Global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Grid-Based City Facilities Management System'도 운영하고 있다. 8개의 구, 33개의 카운티, 15개의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최종 유저인 시민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을 통해 지리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기록, 면허 기록 등을 관리하고, 베이징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매 2분마다 새로 업데이트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교통상황 정보는 방송국에도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운전중 라디오를 통한 현재 도로 상황의 확인을 가능케 한다.

3. 결 어

이상에서 중국의 공공정보화 현황, 특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새로운 환경변화 만큼 각국의 정보화 수준 또한 발전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보화 추진 방향과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금 중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보급되었거나 그 성숙도가 최고에 올라있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시아 신흥 경제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2008), 『발표자료집』
- [2] UN(2007), 『UN e-Government Survey 2008: From e-Government to Connected Governance』
- [3] Darrell M. West(2008), 『Improving Technology Utilization in Electronic Government around the World』, Brookings Institute

EU의 인터넷 전화 규제 동향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김지영
(T. 570-4353, neofugue@kisdi.re.kr)

1. 개 요

VoIP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발표되는 가운데 WIK Consult는 EU의 VoIP 규제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EU 회원국 간 VoIP 규제의 조율,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하였다.¹⁾ 본고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긴급통신서비스와 번호할당 및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2. EU의 VoIP 사업자 분류

먼저, EU 회원국의 개괄적인 사업자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EU의 Framework Directive와 보편적서비스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①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²⁾ (이하 ECS), ② publicly Available Telephone Service(이하 PATS),³⁾

1) WIK-Consult(2008). The Regulation of Voice over IP(VoIP) in Europe, 2008. 3. 19.

2) ECS는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① 정상적으로 수익을 위해 제공되며, ② 완전히 혹은 주로 전자 통신망에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3) PATS는 보편적서비스지침에 의해 ① 공중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국내·국제전화에 대한 착발신 가능, ③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 ④ 국내·국제 표준에 따른 번호를 사용하는 음성통신서비